

'낙태죄 위헌' 공개변론 내달로 연기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5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당초 이달 24일에 예정되었으나 변론 준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이 변경됐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말 변론 예정했으나 일정 변경 2012년에 재판관 4대4로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찬반 입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

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 낙태죄를 현행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4대4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달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지금은 그때 판단을 내린 재판관들이 모두 퇴임했다. 당시 현재는 "태아가 비록 생명유지를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뉴스

인도 불법 밀주 사망자 계속 증가

인도네시아가 11일 불법 제조된 밀주를 마시고 숨진 사람이 4월 들어서만 1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밀주 생산 및 유통에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함마드 시아푸르인 인도네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이날 4월에만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주를 마시고 생명을 잃었다면서 희생자 대부분은 웨스트 자바주와 자카르타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칼리만탄주 남부 등 다른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시아푸르인 부청장은 기자들에게 모든 지역 경찰서장들에게 밀주를 마셔 목숨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밀주의 생산과 유통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주류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돼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불법 밀주를 다루는 암시장을 애용하고 있다.

이달 들어 밀주를 마시고 숨진 사람은 지난 9일 48명에서 10일에는 76명으로 하루 새 28명이 증가한데 이어 이날 또 하루 만에 100명을 넘어서 24명 이상 늘어났다.

미 오이타현 산사태로 주택 3채 덮쳐 6명 실종

일본 남부 규슈(九州)에 위치한 오이타(大分)현에서 11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일본 NHK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전 4시경 오이타현 나가쓰(中津)시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산간지구에서 뒷산이 붕괴하면서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 4채 중 3채를 덮쳐 주민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소식에 경찰 및 소방대원 약 20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산사태로 붕괴돼 밀려나온 토사는 폭이 약 100m, 높이가 약 50~60m정도라고 NHK는 전했다.

사고 현장 가까이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은 "붕괴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산사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산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 있어서 놀랐다"면서 "폭우나 지진 등 산사태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이타지방 기상대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는 10일 밤~11일 아침 6시까지 24시간 동안 0.5mm이상의 강우량은 관측되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4.5mm, 7일에는 1.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됐지만, 8~10일까지 3일 동안 0.5mm이상의 강우량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 골프장에 경비행기 추락, 6명 사망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교외의 한 골프장에 6명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 타고 있던 6명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비행기는 9일 밤 근처의 한 비행장에서 이륙한 후 곧 추락한 뒤 불탔으며 탑승자의 신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행선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상에서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스코츠데일 경찰의 케빈 위츠 대변인은 말했다.

사망자 신원은 현지 메리코파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에서 검사가 끝난 뒤 발표하기로 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다고 위츠는 말했다.

추락한 경비행기 파일럿 PA-24기가 추락한 곳은 TPC스코츠데일 챔피언스 골프장으로 해마다 2월에 PGA파닉스 오픈대회가 열리는 스테이디엄 코스와 같은 회사이다.

브라질서 탈옥범-경찰 총격전, 20명 사망

브라질 북부의 피라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10일(현지시간) 집단 탈출하려는 죄수들과 경찰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20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피라주 공공안전국은 주도 벨렐의 시내에 있는 산타 이자벨 교도소에서 일어난 이 총격전으로 숨진 죄수들과 협조자들의 시신 19구가 현재 확인되었으며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탈옥에 성공한 죄수들의 수는 최종적인 확인을 거친 뒤에야 공표할 수 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현지 경찰은 총격전 이후 권총 3정과 다른 종류의 총기 2개를 탈옥을 주도한 그룹으로부터 압수했다고 밝혔다.

선저 폐수 무단 배출 인도 유조선 검거해

여수시 남쪽 바다에 선저 폐수(배 밑바닥 폐수)를 몰래 버린 2만t급 인도 유조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오후 4시 35분께 여수시 오동도 남동쪽 2.9km 해상에 정박 중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인도선적 2만t급 S(2E19998)호 기관장 A(52·인도국적)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여수 탱크터미널에서 휘발유 1138만5000l를 싣고 필리핀 바탐항으로 이동 중 선체에 규망이 생겨 여수 오동도 표박지에 긴급 투박한 뒤 기관실 배출 펌프를 이용해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2290l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여수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분석을 통해 서해지방청 소속 광역조사팀과 함께 혐의 선박 19척을 확보하고 각 기관실 검사를 통해 S호를 적발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9일 오후 4시 47분께 여수시 오동도 남동쪽 해상을 이동 중인 도선이 약 20x40m 상당의 검은색 기름띠를 발견하고 신고함에 따라 경비함정 5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방제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홍도화꽃이 참 예뻐요 11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하백마을 한 나무농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활짝 핀 홍도화를 구경하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드론으로 잡는다

환경부가 드론(무인항공기)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 상시 감시가 어려웠던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11일 오전부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은 가규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전국 평균(46.7ug/m³)보다 높은 56ug/m³를 기록했다. 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면 불법 배

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이 투입돼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드론은 하늘에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찾아내고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120m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에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PM, VOCs 등 30여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장착돼 있다.

지상에서는 질량분석기 등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갖춘 이동측정차량이 대기오염지역 오염 현황을 파악해 대기유해물질 고농도 지역을 선정한다. 사업장 밖을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료 채취 및 전처리 과정 없이 ppt(1조분의 1)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이들 장비로 85개 소규모 업체 단속에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내고 이 중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4건(약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전국 5만7500개 가운데 연간 배출량이 10t 이하인 소규모업체(4·5종) 사업장은 5만2004개로 90.4%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이런 소규모업체 비중이 94.9%(2만 4072개 중 2만2853개)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선 연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 정도를 뽐내고 있고 업체 수 대비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